



의안번호	제 2018 - 28호
보 고 연 월 일	2018. 10. 26. (제90차 정기회의)

보  
고  
안  
건

## 전문위원 업무보고

제 출 자	수석전문위원
-------	--------





# **목 차**

- I. 제120차 전체회의 ..... 1**
  - 1. 일시.장소 ..... 1
  - 2. 참석자(12명) ..... 1
  - 3. 주요 안건 ..... 1
- II.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(형량범위) ..... 2**
  - 1.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..... 2
  - 2. 유형분류에 따른 구성요건과 법정형 ..... 3
  - 3. 대유형 1 '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' 형량범위 검토 ..... 5
  - 4. 대유형 2 '모욕' 형량범위 검토 ..... 11
  - 5. 소결론 - 형량범위(안) ..... 16
- III.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(형량범위)·· 17**
  - 1.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..... 17
  - 2. 양형자료조사결과 ..... 17
  - 3. 유사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..... 19
  - 4. 비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형량범위 검토 : 의견 일치 ..... 22
  - 5. 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형량범위 검토 : 의견 불일치 ..... 23
  - 6. 소결론 - 형량범위(안) ..... 25
- IV.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(형량범위) ..... 26**
  - 1.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..... 26
  - 2. 양형자료조사결과 ..... 26
  - 3. 유사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..... 28
  - 4. 소유형 1 '비영업적·비조직적 범행'의 형량범위 검토 : 의견 일치 ..... 30
  - 5. 소유형 2 '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'의 형량범위 검토 : 의견 불일치 ..... 31

6. 소결론 – 형량범위(안) .....	34
<b>V. 향후 일정 .....</b>	<b>34</b>

**【별첨】**

- 송오섭, “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(형량범위)”
- 김찬중, 차호동, “명예훼손 양형기준 검토[2](형량범위)”
- 전휴재, “유사수신행위범죄 양형기준 검토 2(권고형량범위)”
- 김찬중, 차호동, “유사수신행위 양형기준 검토[2](형량범위)”
- 전휴재, “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검토 2(권고형량범위)”
- 김찬중, 차호동, 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검토 2(형량범위)”

# I. 제120차 전체회의

## 1. 일시 · 장소

- 일시 : 2018. 10. 1.(월) 15:30 ~ 18:4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## 2. 참석자(12명)

- 수석전문위원, 강수진, 권상진, 김찬중, 김혜경, 김희연, 송오섭, 이진국, 전휴재, 차호동, 최준혁, 한상규 전문위원(이상 가나다 순)
  - 범현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
- 간사 : 운영지원단장

## 3. 주요 안건

- 「명예훼손범죄」, 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」, 「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」 양형기준 설정방안(형량범위) 검토

## II.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(형량범위)

### 1.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

#### 가. 설정범위

##### ○ 설정범위 포함

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(형법 제307조 제2항, 제309조 제2항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<sup>1)</sup> 제70조 제2항, 군형법 제64조 제4항), 사자명예훼손죄(형법 제308조), 모욕죄(형법 제311조), 상관모욕죄(군형법 제64조 제1, 2항)

##### ○ 설정범위 제외

사실적시 명예훼손죄(형법 제307조 제1항, 제309조 제1항,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, 군형법 제64조 제3항), 법정, 국회의원장 모욕·소동죄(형법 제138조), 외국인수 모욕·명예훼손죄(형법 제107조 제2항), 외국사절 모욕·명예훼손죄(형법 제108조 제2항), 초병모욕죄(군형법 제65조)

#### 나. 유형분류

##### 1.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명예훼손			
2	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			

##### 2. 모욕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모욕			
2	상관모욕			

1) 다음부터 '정보통신망법'이라고 약칭함.

-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유형분류 방안에 따른 유형별 명칭을 추가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명칭이 적절하다는 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

### ① 대유형 1의 명칭

- ‘명예훼손’으로 표기할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’으로 표기

### ② 대유형 1 중 소유형 1의 명칭

- 일반법과 특별법의 순서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고, 아울러 형법 제309조 제2항이 ‘신문,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’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‘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’으로 표기

## 2. 유형분류에 따른 구성요건과 법정형

### 가.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

유형	죄명	적용법조	구성요건	법정형
1유형 (일반명예훼손)	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	§ 307 ②	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	5년↓ 징역, 10년↓ 자격정지, 1,000만 원↓ 벌금
	사자명예훼손	§ 308	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	2년↓ 징역 또는 금고, 500만 원↓ 벌금
	상관명예훼손 (허위사실적시)	군 § 64 ④	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	5년↓ 징역 또는 금고
2유형 (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)	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	§ 309 ②	비방할 목적으로 신문,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§ 307 ② 죄	7년↓ 징역, 10년↓ 자격정지, 1,500만 원↓ 벌금
	정보통신망법 위반(명예훼손)	정보통신망법 § 70 ②	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	7년↓ 징역, 10년↓ 자격정지, 5,000만 원↓ 벌금

## 나. 모욕

유형	죄명	적용법조	구성요건	법정형
1유형 (일반모욕)	모욕	§ 311	공연히 사람을 모욕	1년↓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↓ 벌금
2유형 (상관모욕)	상관모욕	군 § 64	①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	2년↓ 징역 또는 금고
			② 문서,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	3년↓ 징역 또는 금고

## 다. 권고 형량범위 설정 시 고려 사항

### ○ 일반적 고려 사항

-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  
는 역할을 하는 것임 ⇨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 
양형실무의 70~80%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 
함. 다만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 
는 범죄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

### ○ 명예훼손범죄군의 특수한 고려 사항

- 법정형이 낮고(징역형의 경우 가장 높은 경우가 7년), 각 유형별로  
법정형에 큰 차이가 없음
- 실무상으로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고, 검사가 구공판을 하  
거나 법관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 그 과정에서 가중적 양형  
인자가 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음(실무상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상  
기본영역이 아닌 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가 많은 개연성 존재)
-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대부분 징역 1년 이하  
이고, 범죄유형별로 선고형량의 차이가 크지 않음



### 3. 대유형 1 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’ 형량범위 검토

#### 가. 양형자료조사결과<sup>2)</sup>

##### (1) 실형/집행유예 비율

세부죄명			선고내역		전체
			실형	집행유예	
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	일반	수	11	55	66
		비율	16.7	83.3	100.0
	사자 (死者)	수	0	1	1
		비율	0.0	100.0	100.0
	상관	수	0	1	1
		비율	0.0	100.0	100.0
출판물 등 ·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	출판물 등 이용	수	0	2	2
		비율	0.0	100.0	100.0
	정보통신망 이용	수	12	58	70
		비율	17.1	82.9	100.0

##### (2) 형량 분포

구분			형량(월)									전체	평균 형량
			2	4	5	6	8	10	12	18	60		
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	일반	수		14		36	9	2	4	1		66	6.52
		비율		21.2		54.5	13.6	3.0	6.1	1.5			
	사자 (死者)	수					1					1	8
		비율					100					1	
	상관	수							1				12
		비율							100				
출판물 등 ·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	출판물 등 이용	수	-	1	-	1	-	-	-		-	2	5.00
		비율	-	50.0	-	50.0	-	-	-		-	100	
	정보통신망 이용	수	1	15	1	30	7	7	8		1	70	7.56
		비율	1.4	21.4	1.4	42.9	10.0	10.0	11.4		1.4	100.0	

2) 이 보고서에 담긴 양형자료조사 결과는 징역형이 선택된 경우에 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으로서 지난 제89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에서 보고된 내용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였음.

### (3) 형량 분포 분석

- 일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평균형량은 징역 6.52월. 징역 6월이 54.5%로 가장 많고, 징역 4월(21.2%), 징역 8월(13.6%)의 순으로 많음. 선고형량이 징역 4월~8월인 경우가 전체의 89.3%에 이룸
-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8월(1건)이,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1년(1건)이 선고된 사건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
-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 4월(1건), 징역 6월(1건)으로서 평균 형량이 징역 5월이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로 볼 수 없음
-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평균형량은 징역 7.56월(60개월을 선고한 1건을 제외하면 6.79월). 징역 6월이 42.9%로 가장 많고, 징역 4월이 21.4%로 그 다음이었음(합계 64.3%)

### 나. 형량범위에 관한 검토 결과

#### (1) 소유형 1 ‘일반 명예훼손’ : 의견 일치

- 법정형이 유사한 일반체포·감금(형법 제276조 제1항 / 징역 5년↓ 또는 벌금 700만 원↓) 등의 양형기준을 참조함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체포·감금	- 8월	6월 - 1년	8월 - 2년

-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함
  - ① 일반체포·감금범죄의 경우 존속체포·감금(징역 10년↓ 또는 벌금 1,500만 원↓), 중체포·감금(징역 7년↓), 존속중체포·감금(징역 2년 이상), 특수중존속체포·감금/상습중존속체포·감금(징역 3년 이상) 등이 포함되므로 이보다 다소 낮게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함

- ② 일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평균형량이 징역 6.52월이나, 구 공판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경우 가중적 양형인자가 주로 고려되었을 개연성이 높음. 따라서 위 평균형량을 기준으로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를 정하게 되면 실제로는 현재의 선고형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과가 됨
- ③ 실무상 징역 6월(54.5%) 다음으로 선고 사례가 많은 징역 4월(21.2%)이 기본 영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
- ④ 실무상 가장 높은 형이 선고된 경우는 징역 18월이나 1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중 영역의 상한으로 설정하여도 실무의 선고 사례를 대부분 포섭할 수 있음

○ 검토 결과

- 기본 영역을 일반체포·감금범죄의 기본 영역과 비교하여 하한을 다소 낮추어 '징역 4월~1년'으로 정하고, 이를 기준으로 감경 영역을 '징역 6월 이하'로, 가중 영역을 '징역 6월~1년 6월'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명예훼손	-6월	4월-1년	6월-1년 6월

(2) 소유형 2 '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' : 의견 불일치

(가) 요약

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

- 감경 영역 : 징역 8월 이하
- 기본 영역의 하한 : 징역 6월

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

- 기본 영역의 상한과 가중 영역

- ㉞ 다수 의견(9인) : 기본 영역의 상한을 '징역 1년 4월'로, 가중 영역을 '징역 8월~2년'으로 정하자는 견해

- ㉞ 제1 소수 의견(2인) : 기본 영역의 상한을 '징역 1년 6월'로, 가중 영역을 '징역 1년~2년 6월'로 정하자는 견해
- ㉞ 제2 소수 의견(1인) : 기본 영역의 상한과 가중 영역의 하한은 다수 의견을, 가중 영역의 상한은 제1 소수 의견을 찬성하는 견해

(나) 상세

-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(징역 7년↓)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

① 상해(형법 제257조 / 징역 7년↓ 또는 벌금 1,000만 원↓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	일반상해	2월 - 10월	4월 - 1년6월	6월 - 2년6월

- 다만 일반상해 유형에는 존속상해(징역 10년↓ 또는 벌금 1,500만 원↓), 상습상해(징역 10년 6월↓ 또는 벌금 1,500만 원↓), 공동존속상해·상습존속상해(징역 15년↓, 벌금 2,250만 원↓) 등이 포함됨

② 일반 장물(형법 제362조 / 징역 7년↓ 또는 벌금 1,500만 원↓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	일반재산에 대한 장물	4월 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3년

- 다만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에는 상습장물(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)이 포함될 수 있음

③ 점유강취, 준점유강취(형법 제325조/ 징역 7년↓ 또는 자격정지 10↓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	점유강취/준점유강취	4월 - 1년	8월 - 1년6월	1년 - 3년

○ 기본 영역의 하한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일치

- 선고형량의 분포, 일반 명예훼손과의 차등 등을 감안할 때, 기본 영역의 하한을 징역 6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

○ 기본 영역의 상한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불일치

- 다수 의견(10인, 징역 1년 4월)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주된 논거로 들었음. 즉 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일반상해 유형이나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에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유형들보다는 다소 낮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여야 함. 이를 고려하여 감경 영역의 상한을 징역 8월로 정할 경우 기본 영역의 상한은 위 유형들의 기본 영역 상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 4월로 정하는 것이 균형에 맞음
- 소수 의견(2인, 징역 1년 6월)은 참고가 되는 일반상해 유형이나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, 점유강취/준점유강취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기본 영역 상한이 징역 1년 6월이고, 실무상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논거로 삼음

○ 가중 영역의 하한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불일치

- 다수 의견(10인, 징역 8월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  - ① 현행 실무상 징역 8월 또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경우가 20%에 이르는데, 소수 의견에 의할 경우 이를 가중 영역에 포함할 수 없게 됨 ⇨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실제 선고사례 중 가중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비율은 약 32.8%
  - ② 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공판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가중적 양형인자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임. 소수 의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규범적으로 지나치게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낳음
  - ③ 소수 의견과 같이 가중 영역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할 경우

참고가 되는 양형기준 중 하나인 일반상해의 가중 영역 하한 (징역 6월)보다 지나치게 높아지게 됨

- 소수 의견(2인, 징역 1년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
- ① 참고가 되는 양형기준인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이나 점유강취/준점유강취 유형의 양형기준상 가중영역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음
- ②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사이에 선고된 사건도 약 12.5%에 이르고 있음

○ 가중 영역의 상한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불일치

- 다수 의견(9인, 징역 2년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
- ① 일반상해 유형이나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에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이 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유형들에 대한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
- ② 실무상 징역 5년이 선고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 2년 범위 내에서 선고되었고, 징역 2년을 상한으로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(특별가중)까지 선고가 가능함
- ③ 양형기준은 전형적인 사건에서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 불법성이 매우 큰 비전형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함으로써 해결 가능

- 소수 의견(3인, 징역 2년 6월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
- ① 출판물 등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엄정한 양형이 필요함. 실제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도 발견됨
- ② 참고가 되는 양형기준 중 상해 유형의 가중 영역 상한은 징역 2년 6월이고, 일반장물, 점유강취, 준점유강취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은 징역 3년임. 최소한 징역 2년 6월로 정하여야 균형이 맞음

○ 견해별 형량범위안은 다음과 같음

① 다수 의견(9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	-8월	6월-1년4월	8월-2년

② 제1 소수 의견(2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	-8월	6월-1년6월	1년-2년6월

③ 제2 소수 의견(1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출판물 등·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	-8월	6월-1년4월	8월-2년6월

#### 4. 대유형 2 ‘모욕’ 형량범위 검토

가. 양형자료조사결과

(1) 실행/집행유예 비율

단위 : 명, %

세부죄명		선고내역		전체
		실행	집행유예	
모욕		수	42	101
		비율	29.4	70.6
상관모욕	공연모욕	수	1	26
		비율	3.7	96.3
	면전모욕	수	1	2
		비율	33.3	66.7
	소계	수	2	28
		비율	6.7	93.3

## (2) 형량 분포

세부죄명			형량(월)												전체	평균 형량
			2	3	4	5	6	8	10	12	18	24	36	60		
모욕			수	5	5	75	1	53	4	-	-	-	-	-	143	4.55
			비율	3.5	3.5	52.4	0.7	37.1	2.8	-	-	-	-	-	100.0	
단기형량 상관모욕	공연모욕	수	-	4	1	-	13	2	-	7	-	-	-	-	27	
		비율	-	14.8	3.7	-	48.2	7.4	-	25.9	-	-	-	-	100.0	
	면전모욕	수	-	-	1	-	1	1	-	-	-	-	-	-	3	
		비율	-	-	33.3	-	33.3	33.3	-	-	-	-	-	-	100.0	
	소계	수	-	4	2	-	14	3	-	7	-	-	-	-	30	7.22
		비율	-	13.3	6.7	-	46.7	10.0	-	23.3	-	-	-	-	100.0	

## (3) 형량 분포 분석

- 일반모욕의 평균형량은 징역 4.55월. 징역 4월이 52.4%로 과반수를 차지하고, 징역 6월이 37.1%로 그 다음임. 조사 대상 사건이 모두 징역 2월에서 8월 사이에서 선고되었음
- 상관모욕의 평균형량은 징역 7.22월. 징역 6월이 46.7%로 가장 많고, 징역 1년(23.3%), 징역 3월(13.3%)이 순차로 뒤를 잇고 있음. 조사 대상 사건이 모두 징역 3월과 징역 1년 사이에서 선고되었음

## 나. 형량범위에 관한 검토 결과

### (1) 소유형 1 ‘일반 모욕’ : 의견 불일치

#### (가) 요약

-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 및 가중 영역 하한은 의견 일치
  - 감경 영역 : 징역 4월 이하
  - 기본 영역 : 징역 2월~8월
  - 가중 영역 하한 : 징역 4월
- 가중 영역 상한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
  - ① 다수 의견(9인) : 가중 영역의 상한을 ‘징역 10월’로 정하자는 견해
  - ② 소수 의견(3인) : 가중 영역의 상한을 ‘징역 1년’으로 정하자는 견해



(나) 상세

-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(징역 1년↓)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

- 도주(형법 제145조 제1항 / 징역 1년↓)<sup>3)</sup>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	도주	- 6월	4월 - 8월	6월 - 1년

- 다만,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도주죄와 달리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음

- 감경 영역, 기본 영역 및 가중 영역 하한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일치

- 선고형량의 분포, 명예훼손, 상관모욕 유형과의 차등, 참고가 되는 도주범죄(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음)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 등을 두루 감안할 때, ① 감경영역은 '징역 4월 이하'로, ② 기본 영역은 '징역 2월~8월'로, ③ 가중 영역 하한은 '징역 4월'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

- 가중 영역 상한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불일치

- 다수 의견(징역 10월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
- ① 조사 대상 사건이 모두 징역 2월에서 8월 사이에 선고되었고, 규범적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도 않아 상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할 실익이 없음
- ②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도주죄와 달리 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모욕의 가중 영역의 권고형량

3) '도주'유형의 권고형량범위 설정 당시, 법정형 상한이 1년인 범죄에 대한 형량기준을 설정한 전례가 없었던 관계로, 양형기준상 유형별 형량범위가 가장 낮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1.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소유형인'방치물 등 절도'의 경우 [감경영역(-6월), 기본영역(4월-8월), 가중영역(6월-1년)]를 참고하였음

범위는 도주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게 설정함이 타당함

- ③ 상관모욕 유형의 법정형(최대 3년 이하) 및 권고 형량범위 상한(징역 1년 2월 ⇨ 의견 일치)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

- 소수 의견(징역 1년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
- ① 실무상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발견됨(3건)  
 - 김찬중, 차호동 전문위원의 '명예훼손 양형기준 검토(2) - 형량범위 -'에 포함된 통계 자료 참조
- ② 참고가 되는 양형기준인 도주유형의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 상한이 징역 1년임

○ 견해별 형량범위안은 다음과 같음

① 다수 의견(9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모욕	-4월	2월-8월	4월-10월

② 소수 의견(3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모욕	-4월	2월-8월	4월-1년

(2) 소유형 2 '상관모욕' : **의견 일치**

(가)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

- 협박(형법 제283조 / 징역 3년↓ 또는 벌금 500만 원↓) ⇨ 상관 공연모욕 관련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	일반 협박	- 8월	2월 - 1년	4월 - 1년6월

- 다만 일반 협박 유형에는 단순 협박뿐 아니라 존속협박(징역 5년↓,

벌금 700만 원↓), 운전자협박(징역 5년↓, 벌금 2,000만 원↓), 공동존속협박·상습존속협박(징역 7년 6월↓, 벌금 1,050만 원 이하) 등이 포함됨

- 폭행(형법 제260조 / 징역 2년↓ 또는 벌금 500만 원↓) ⇨ 상관면전모욕 관련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	일반 폭행	- 8월	2월 - 10월	4월 - 1년

- 다만 일반 폭행 유형에는 단순 폭행뿐 아니라, 존속폭행(징역 5년↓, 벌금 700만 원↓), 운전자폭행(징역 5년↓, 벌금 2,000만 원↓), 공동존속폭행·상습존속폭행(징역 7년 6월↓, 벌금 1,050만 원↓)이 포함됨

#### (나) 선고형량의 반영

- 기본 영역 : 2유형(상관모욕)의 경우 평균형량이 징역 7.22월이고,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가 46.7%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할 때, 기본 영역의 하한은 징역 4월로, 상한은 징역 10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
- 감경 영역 및 가중 영역 : 명예훼손 유형 및 일반모욕 유형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와의 조화, 양형자료조사결과 가장 높은 선고형이 징역 1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, 감경 영역의 상한은 징역 6월로, 가중 영역은 하한을 징역 6월로 상한을 징역 1년 2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

#### (다) 형량범위안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상관모욕	-6월	4월-10월	6월-1년2월

## 5. 소결론 - 형량범위(안)

### 1.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

유형	구 분	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 명예훼손	의견 일치	-6월	4월-1년	6월-1년 6월
2	출판물 등 ·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	다수 의견	-8월	6월-1년 4월	8월-2년
		제1 소수 의견	-8월	6월-1년 6월	1년-2년 6월
		제2 소수 의견	-8월	6월-1년 4월	8월-2년 6월

### 2. 모욕

유형	구 분	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모욕	다수 의견	-4월	2월-8월	4월-10월
		소수 의견	-4월	2월-8월	4월-1년
2	상관모욕	의견 일치	-6월	4월-10월	6월-1년 2월

### Ⅲ.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을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(형량범위)

#### 1.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

##### 가. 설정범위

적용법조		구성요건	법정형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<sup>4)</sup>	제6조 제1항	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	5년↓ 징역 또는 5,000만 원↓ 벌금

##### 나. 유형분류

유형	구 분 (조직적 범행인지 여부를 기준)	감경	기본	가중
1	비조직적 범행 <sup>5)</sup>			
2	조직적 범행 <sup>6)</sup>			

#### 2. 양형자료조사결과

##### 가. 실행/집행유예 비율

단위: 명, %

법조		선고내역		전체
		실행	집행유예	
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	수	67	372	439
	비율	15.3	84.7	100.0

##### 나. 형량 분포

##### (1) 전체

4) 다음부터 ‘유사수신행위법’이라고 약칭함

5) 조직적 범행 이외에 나머지 경우

6) 우두머리, 중간관리자, 모집책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

단위: 명, %

법조		형량(월)														전체
		4	5	6	8	10	12	14	16	18	24	30	36	42	48	
유사수신 행위법 제6조 제1항	수	22	4	91	93	102	76	1	3	31	10	2	2	1	1	439
	비율	5.0	0.9	20.7	21.2	23.2	17.3	0.2	0.7	7.1	2.3	0.5	0.5	0.2	0.2	100.0

## (2) 실행

단위: 명, %

법조		형량(월)														전체
		4	5	6	8	10	12	14	16	18	24	30	36	42	48	
유사수신 행위법 제6조 제1항	수	22	4	91	93	102	76	1	3	31	10	2	2	1	1	439
	비율	5.0	0.9	20.7	21.2	23.2	17.3	0.2	0.7	7.1	2.3	0.5	0.5	0.2	0.2	100.0

## (3) 집행유예

단위: 명, %

법조		형량(월)												전체
		4	5	6	8	10	12	14	16	18	24	30	36	
유사수신 행위법 제6조 제1항	수	21	3	81	83	92	62	1	1	18	7	1	2	372
	비율	5.6	0.8	21.8	22.3	24.7	16.7	0.3	0.3	4.8	1.9	0.3	0.5	100.0

## (4) 비조직적·조직적 행위 건수 및 평균형량

구 분		형량(월)														전체
		4	5	6	8	10	12	14	16	18	24	30	36	42	48	
비조직적	수	5	1	17	12	10	9	0	1	2	0	0	0	0	0	57
	비율	8.7	1.7	29.8	21	17.5	15.7	0	1.7	3.5	0	0	0	0	0	100.0
조직적	수	18	3	74	81	92	66	1	2	29	10	2	2	1	1	382
	비율	4.4	0.7	19.3	21.2	24	17.5	0.2	0.5	7.5	2.6	0.5	0.5	0.2	0.2	100.0

#### 다. 형량 분포 분석

- 전체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평균형량은 징역 10.3월. 징역 10월이 23.2%로 가장 많고, 징역 8월(21.2%), 징역 6월(20.7%), 징역 12월(17.3%), 징역 18월(7.1%)이 순으로 나타남. 징역 6월에서 12월이 선고된 사건의 합계는 82.4%에 이름
- 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경우 평균형량은 징역 10.3월. 징역 10월이 24%로 가장 많고, 징역 8월(21.2%), 징역 6월(19.3%), 징역 12월(17.5%), 징역 18월(7.5%)의 순으로 나타남. 징역 6월에서 12월이 선고된 사건의 합계는 81.9%에 이름
- 비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경우 평균형량은 징역 8.5월. 징역 6월이 29.8%로 가장 많고, 징역 8월(21%), 징역 10월(17.5%), 징역 12월(15.7%), 징역 4월(8.7%)이 순으로 나타남. 징역 4월에서 12월이 선고된 사건의 합계는 94.7%(징역 6월에서 12월이 선고된 사건의 합계는 84.2%)에 이름

### 3. 유사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

#### (1) 대부업법위반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미등록 대부업 등 <sup>7)</sup>	- 10월	6월 - 1년 6월	1년 - 4년

#### (2) 채권추심법위반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폭행, 협박 등 행위 <sup>8)</sup>	- 8월	6월 - 1년 6월	10월 - 3년 6월

7)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: 5년↓ 징역 또는 5,000만 원↓ 벌금

8)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: 5년↓ 징역 또는 5,000만 원↓ 벌금

(3) 사행성·게임물 범죄 중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, 무허가 카지노  
업 등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사행성 유기기구 영업, 무허가 카지노업 <sup>9)</sup>	4월 - 10월	8월 - 1년 6월	1년 - 3년 6월
2	도박장소공간 개설 <sup>10)</sup>	4월 - 10월	8월 - 1년 6월	1년 - 4년
3	유사경마 <sup>11)</sup>	4월 - 10월	8월 - 1년 6월	1년 - 3년 6월
4	환전·환전알선·재매입 영업 <sup>12)</sup>	4월 - 10월	8월 - 1년 6월	1년 - 3년 6월
5	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<sup>13)</sup>	4월 - 10월	8월 - 1년 6월	1년 - 3년 6월
6	미등급·사행성·게임물, 사행성 유기기구, 온라인 스포츠투토 발행시스템 <sup>14)</sup>	4월 - 10월	8월 - 1년 6월	1년 - 3년 6월

(4) 배임수재<sup>15)</sup>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3,000만 원 미만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 6월
2	3,000만 원 이상, 5,000만 원 미만	6월 - 1년	8월 - 1년 6월	1년 - 2년 6월
3	5,000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	10월 - 2년	1년 - 2년 6월	2년 - 3년 6월
4	1억 원 이상	1년 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5년

9)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(다음부터 ‘사행행위규제법’으로 약칭) 제30조 제1항 제1호,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: 5년↓ 징역 또는 5,000만 원↓ 벌금

10) 형법 제247조 : 5년↓ 징역 또는 3,000만 원↓ 벌금

11)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: 5년↓ 징역 또는 5,000만 원↓ 벌금

12)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다음부터 ‘게임산업법’으로 약칭) 제44조 제1항 제2호 : 5년↓ 징역 또는 5,000만 원↓ 벌금

13)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, 제1호의2, 제2호 : 5년↓ 징역 또는 5,000만 원↓ 벌금

14) 게임산업법 제1항 제2호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(다음부터 ‘사행행위규제법’으로 약칭) 제30조 제1항 제2호,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: 5년↓ 징역 또는 5,000만 원↓ 벌금

15) 형법 제357조 제1항 : 5년↓ 징역 또는 1,000만 원↓ 벌금



(5) 변호사법위반 중 재판·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<sup>16)</sup>,  
청탁·알선명목 금품수수<sup>17)</sup>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3,000만 원 미만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 6월
2	3,000만 원 이상, 5,000만 원 미만	6월 - 1년	8월 - 1년 6월	1년 - 2년 6월
3	5,000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	10월 - 2년	1년 - 2년 6월	2년 - 3년 6월
4	1억 원 이상	1년 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5년

(6) 뇌물수수(요구, 약속)<sup>18)</sup>, 부정처사후수뢰<sup>19)</sup>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,000만 원 미만	- 6월	4월 - 1년	8월 - 2년
2	1,000만 원 이상, 3,000만 원 미만 <sup>20)</sup>	8월 - 2년	1년 - 3년	2년 - 4년

(7) 횡령·배임<sup>21)</sup>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- 10월	4월 - 1년 4월	10월 - 2년 6월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 <sup>22)</sup>	6월 - 2년	1년 - 3년	2년 - 5년

16) 변호사법 제110조 : 5년↓ 징역 또는 3,000만 원↓ 벌금

17) 변호사법 제111조 : 5년↓ 징역 또는 1,000만 원↓ 벌금

18) 형법 제129조 제1항 : 5년↓ 징역 또는 10년↓ 자격정지

19) 형법 제131조 제3항 : 5년↓ 징역 또는 10년↓ 자격정지

20) 3,000만 원 이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상이해지므로(① 3,0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: 5년 이상의 유기징역, ② 5,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: 7년 이상의 유기징역, ③ 1억 원 이상 :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) 다루지 않음

21) 형법 제355조 제1항, 제2항 : 5년↓ 징역 또는 1,500만 원↓ 벌금

22) 5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상이해지므로(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: 3년 이상의 유기징역, ② 50억 원 이상 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) 다루지 않음

#### 4. 비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형량범위 검토 : 의견 일치

- 현행 ① 양형실무상 징역 4월~12월이 94.7%를 차지하는 점, ② 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평균형량이 징역 10.3월이고, 비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평균형량이 징역 8.5월로 약 2개월의 차이가 있는 점, ③ 배임수재, 횡령·배임 범죄군 등에서 기본영역 하한을 징역 4월로 설정한 예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
- 감경 영역의 경우 ① 비조직적 범행의 경우 징역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선고 사례가 분포하고 있어 형량범위의 중첩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, ② 법정형이 동일한 폭행, 협박 등 행위로 인한 채권추심법위반의 형량범위의 감경영역이 징역 8월 이하인 점 등을 추가 고려함
- 가중영역의 경우 ① 통계자료상 징역 18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 점, ② 구체적 사례에서 고려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형량범위에 탄력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, ③ 법정형이 같은 뇌물수수 등에서 징역 8월-2년으로 가중영역을 설정한 예가 있는 점 등을 추가 고려함
- 형량범위안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비조직적 범행	- 8월	4월 - 1년	8월 - 2년

## 5. 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형량범위 검토 : 의견 불일치

### 가. 요약

-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은 의견 일치
  - 감경 영역 : 징역 10월 이하
  - 기본 영역 : 징역 6월~1년 6월
- 가중 영역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
  - ① 다수 의견(9인) : 가중 영역을 '징역 1년~4년'으로 정하자는 견해
  - ② 소수 의견(3인) : 가중 영역을 '징역 10월~3년 6월'로 정하자는 견해

### 나. 상세

- 기본 영역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일치
  - 양형실무상 징역 6월~18월의 합계가 89.9%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, 불법성이 유사한 미등록 대부업 등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권고 형량범위(기본 영역: 징역 6월~1년 6월)와 유사하게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적정함
  - 통계자료 중 89.9%가 기본영역에 포섭되어 양형기준 준수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, 유사범죄와의 형량범위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기본영역이 합리적으로 보임
- 감경 영역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일치
  - 상한의 경우 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경우 현행 양형실무상 평균형량이 징역 10.3월인데, 징역 10월이 24%로 가장 많고, 징역 8월(21.2%), 징역 6월(19.3%)의 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경영역의 상한은 징역 10월이 적정함
  - 하한의 경우 ① 유사수신행위의 기간·금액이 극히 짧거나 소액인 경우,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등과 같이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도 포섭할 수 있어야 하는 점, ② 법정형과 행위태양이 유사한 미등록 대부업 등의 경우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, 별도의 하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

○ 가중 영역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불일치

- 다수 의견(징역 1년~4년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
- ① 법정형과 행위태양이 유사한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 상한이 4년으로 설정되어 있음
- ② 피해 규모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유사수신범죄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 설정에 따라 특별가중영역으로 법정형 상한인 5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해짐
- ③ 양형실무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이러한 사례도 포섭함이 타당함

- 소수 의견(징역 10월~3년 6월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
- ①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조직구조에 따라 가담정도와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음. 다수 의견에 의할 경우 현행 실무례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징역 10월(24%)보다 가중 영역의 하한이 높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
- ② 비슷한 법정형을 가진 다수의 범죄유형에 있어서 가중 영역의 상한이 징역 3년 6월로 설정한 사례가 적지 않음
- ③ 양형실무상 징역 3년 6월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, 상한을 징역 3년 6월로 설정하더라도 특별가중 시 5년 3월까지 권고할 수 있음

○ 견해별 형량범위안은 아래와 같음

① 다수 의견(9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조직적 범행	- 10월	6월 - 1년 6월	1년 - 4년

② 소수 의견(3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조직적 범행	- 10월	6월 - 1년 6월	10월 - 3년 6월

## 6. 소결론 - 형량범위(안)

유형	구 분		감경	기본	가중
1	비조직적 범행	의견 일치	-8월	4월-1년	8월-2년
2	조직적 범행	다수 의견	-10월	6월-1년 6월	1년-4년
		소수 의견	-10월	6월-1년 6월	10월-3년 6월

## IV.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(형량범위)

### 1.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

#### 가. 설정범위

-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, 2, 3, 4호

적용법조	구성요건	법정형
제49조 제4항	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	3년↓ 징역 또는 2천만 원↓ 벌금 (병과 가능)
	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한 자	
	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	
	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	

#### 나. 유형분류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비영업적·비조직적 범행			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		

- 소유형1의 명칭에 대하여 '일반 범행'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, 차회 전문위원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함

### 2. 양형자료조사결과

#### 가. 실행/집행유예 비율

단위: 명, %

법조		선고내역		전체
		실행	집행유예	
전자금융거래법 (제49조④1)	수	155	822	977
	비율	15.9	84.1	100.0
전자금융거래법 (제49조④2)	수	125	836	961
	비율	13.0	87.0	100.0
전자금융거래법 (제49조④3)	수	0	2	2
	비율	0.0	100.0	100.0
전자금융거래법 (제49조④4)	수	4	11	15
	비율	26.7	73.3	100.0

단위: 명, %

법조		선고내역		전체
		실형	집행유예	
전체	수	284	1,671	1,955
	비율	14.5	85.5	100.0

## 나. 형량 분포

### (1) 전체

단위: 명, %

법조		형량(월)																전체
		1	2	3	4	5	6	7	8	9	10	12	14	18	20	24	36	
전자금융 거래법 (제49조 ④1)	수	2	7	17	352	14	397	0	99	0	40	39	0	6	0	2	2	977
	비율	0.2	0.7	1.7	36.0	1.4	40.6	0.0	10.1	0.0	4.1	4.0	0.0	0.6	0.0	0.2	0.2	100.0
전자금융 거래법 (제49조 ④2)	수	0	6	14	426	6	309	1	68	1	60	47	3	13	1	5	1	961
	비율	0.0	0.6	1.5	44.3	0.6	32.2	0.1	7.1	0.1	6.2	4.9	0.3	1.4	0.1	0.5	0.1	100.0
전자금융 거래법 (제49조 ④3)	수	0	0	0	2	0	0	0	0	0	0	0	0	0	0	0	0	2
	비율	0.0	0.0	0.0	10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	100.0
전자금융 거래법 (제49조 ④4)	수	0	0	0	1	1	4	0	2	0	5	2	0	0	0	0	0	15
	비율	0.0	0.0	0.0	6.7	6.7	26.7	0.0	13.3	0.0	33.3	13.3	0.0	0.0	0.0	0.0	0.0	100.0
전체	수	2	13	31	781	21	710	1	169	1	105	88	3	19	1	7	3	1,955
	비율	0.1	0.7	1.6	39.9	1.1	36.3	0.1	8.6	0.1	5.4	4.5	0.2	1.0	0.1	0.4	0.2	100.0

### (2) 적용법조별,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른 형량 분포<sup>23)</sup>

적용법조		평균형량 (수, 비율)	조직적 범행 여부	
			조직적	비조직적
제1호		6.07월 (983건, 50.25%)	9.15월 (116건)	5.66월 (867건)
제2호	(2호)	5.41월 (776건, 39.67%)	10.54월 (48건)	5.07월 (728건)
	(3호)	<b>8.73월</b> (183건, 9.35%)	10.12월 (114건)	6.43월 (69건)
제3호		-	-	-
제4호		8.07월 (14건, 0.71%)	9.43월 (7건)	6.71월 (7건)
전체평균		6.07월 (1,956건, 100%)	9.78월 (285건, 14.57%)	5.44월 (1,671건, 85.42%)

### (3) 형량 분포 분석

- 전체범죄 평균형량은 징역 6.07월. 전체 선고사례의 86.0%(1,682건)가 징역 4월~8월에 분포
- 2호(3호)의 평균형량은 징역 8.73월. 전체 선고건수의 82.5%(151건)가 징역 6월~1년 6월에 분포
  - 반면 나머지 범죄의 평균 형량은 징역 5.79월이고, 전체 선고건수의 93.1%(1,651건)가 징역 4월~10월에 분포

적용법조		형량(월)																전체
		1	2	3	4	5	6	7	8	9	10	12	14	18	20	24	36	
2호(3호)	수	-	-	2	26	1	46	-	29	1	36	26	3	10	-	3	-	183
나머지	수	3	13	29	755	20	667	1	141	-	67	62	-	9	1	3	3	1773

- 조직적 범행의 평균 형량은 징역 9.78월. 전체 선고건수의 88.8%(253건)가 징역 6월~1년 6월에 분포
  - 반면 비조직적 범행의 평균 형량은 징역 5.44월이고, 전체 선고건수의 95.6%(1,598건)가 징역 4월~10월에 분포

구분		형량(월)																전체
		1	2	3	4	5	6	7	8	9	10	12	14	18	20	24	36	
조직적	수	1	1	3	16	2	54	-	52	1	66	62	3	15	1	6	2	285
비조직적	수	2	12	28	765	19	659	1	117	-	37	26	-	4	-	-	1	1,671

## 3. 유사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

### 가. 협박(형법 제283조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	일반협박	- 8월	2월 - 1년	4월 - 1년 6월

23) 주무 전문위원인 전후재 전문위원이 양형지원단으로부터 본건 통계자료 산출에 활용된 판결의 사건번호 등을 전달받아 해당 판결 모두를 전수 조사한 결과임



나. 재물손괴(형법 제366조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재물손괴 등	- 6월	4월 - 10월	8월 - 1년 6월

다. 강제집행면탈(형법 제327조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4	강제집행면탈	- 8월	6월 - 1년	8월 - 2년

라. 일반 조세포탈(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3억 원 미만	- 8월	6월 - 10월	8월 - 1년 2월
2	3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6월 - 1년	8월 - 1년 2월	1년 - 2년
3	5억 원 이상	8월 - 1년 6월	1년 - 2년	1년 6월 - 2년 6월

마.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(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30억 원 미만	- 10월	6월 - 1년	10월 - 1년 2월
2	30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6월 - 1년	8월 - 1년 2월	1년 - 2년
3	50억 원 이상	8월 - 1년 6월	1년 - 2년	1년 6월 - 2년 6월

바. 복권발행(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), 복표 발매·중개(형법 제248조 제2항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복권 발행, 복표 발매·중개	4월 - 10월	6월 - 1년 6월	1년 - 3년

사. 유사경륜·경정 등(경륜·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, 제24조, 전 통소싸움법 제26조 제1항 제1호, 제22호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유사경륜·경정 등	4월 - 10월	8월 - 1년 6월	1년 - 3년

아. 사행행위영업, 사행기구 제조·판매업(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, 제30조 제2항 제3호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2	사행행위영업, 사행기구 제조·판매업	- 8월	6월 - 1년 4월	10월 - 2년

자. 이자율 제한위반 등(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이자율 제한위반 등	-6월	4월 - 10월	8월 - 2년

#### 4. 소유형 1 ‘비영업적·비조직적 범행’의 형량범위 검토 : 의견 일치

##### ○ 기본 영역

-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의 경우, 기본 영역을 징역 4월~10월로 설정하면, 대부분의 선고 사례를 포섭할 수 있음
-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인 재물손괴 등 범죄와 이자율 제한위반 등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범죄에서 기본영역을 징역 4월~10월로 설정한 사례가 있는 점도 고려함

##### ○ 감경 영역

- 형량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상한은 징역 6월로 설정함이 합리적임. 하한의 경우 징역 1월 또는 2월을 선고한 사례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점,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군 대부분 감경영역의 하한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

○ 가중 영역

- 하한의 경우 접근매체 수가 10개 이상으로 다량임에도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.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한은 징역 6월로 설정함이 적절함
- 상한의 경우 제1유형에 해당하는 사건(1,671건) 중에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5건에 불과한 점, 법정형과 제2유형 가중영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, 징역 1년2월로 정함이 합리적임

○ 형량범위안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1	비영업적·비조직적 범행	- 6월	4월 - 10월	6월 - 1년 2월

## 5. 소유형 2 ‘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’의 형량범위

### 검토 : 의견 불일치

#### 가. 요약

- 기본 영역 상한과 가중 영역 하한은 의견 일치
  - 기본 영역 상한 : 징역 1년 6월
  - 가중 영역 하한 : 징역 10월
-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 하한 및 가중 영역 상한은 의견 불일치
  - ① 다수 의견(10인) : 감경 영역을 ‘징역 8월 이하’로, 기본 영역 하한을 ‘징역 6월’로, 가중 영역 상한을 ‘징역 2년 6월’로 정하자는 견해
  - ② 소수 의견(2인) : 감경 영역을 ‘징역 4월~10월’로, 기본 영역 하한을 ‘징역 8월’로, 가중 영역 상한을 ‘징역 2년’으로 정하자는 견해<sup>24)</sup>

24) 기본 영역 하한과 감경 영역에 대하여 소수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과 가중 영역 상한에 대하여 소수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이 같지 않으나 편의상 양자를 구별하지 않음

## 나. 상세

### (1) 기본 영역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일부 불일치

- 기본 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설정할 경우 대부분의 조직적 범행을 기본 영역의 포섭할 수 있으므로, 기본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 일치함
- 기본 영역의 하한에 관하여는 의견 불일치
  - 다수 의견(10인, 징역 6월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    - ①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유형에서 기본 영역의 하한이 대부분 징역 6월로 설정됨
    - ② 소수 의견(징역 8월)에 의할 경우 소유형 2에서 실제 선고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는 징역 6월(19%)을 기본 영역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어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양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
  - 소수 의견(2인, 징역 8월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    - ① 영업적, 조직적, 범죄이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유형 2의 특성을 감안할 때, 엄정한 양형이 필요함
    - ② 양형자료조사결과에 의하면 징역 8월이 18.2%, 징역 10월이 23.2%이므로 징역 6월을 기본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법관의 양형재량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은 아님

### (2) 감경 영역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불일치

- 다수 의견(10인, 징역 8월 이하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  - ① 소유형 2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가담 정도나 경위, 횡수 등에 따라서는 낮은 형의 선고도 필요하고 실제로 징역 1월(1건), 2월(1건) 등을 처벌한 사례도 있으므로 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높지 않음
  - ②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군의 대부분에서 감경 영역의 하한을 설정하지 않았음

- ③ 감경 영역의 하한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형량 분포 등을 감안할 때 감경 영역의 상한은 8월이 적정함. 만약 징역 10월을 상한으로 설정하게 되면 감경 영역에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포섭될 우려가 있음

○ 소수 의견(2인, 징역 4월~10월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
- ① 형량 분포에 의하면, 대부분의 사안에서 징역 4월 이상이 선고되고 있고 징역 4월 미만으로 선고되는 사례는 흔치 않음
- ② 소유형 2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정한 양형이 필요함

(3) 가중 영역에 관한 논의 결과 ☞ 의견 일부 불일치

- 형량 분포, 기본 영역 등과의 균형을 감안할 때 가중 영역의 하한을 징역 10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 일치함
- 가중 영역의 상한에 관하여는 의견 불일치
  - 다수 의견(10인, 징역 2년 6월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    - ① 불법성이 큰 소유형 2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중 영역의 폭을 다소 넓게 하여 양형 재량을 보장할 필요 있음
    - ② 실제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발견됨
  - 소수 의견(2인, 징역 2년)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
    - ① 소유형 1과 소유형 2의 불법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법정형임에도 권고 형량범위를 2배 이상 차이나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(소유형 1의 가중영역 상한은 징역 1년 2월)
    - ② 징역 2년으로 설정하더라도 불법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서 특별가중을 하는 경우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함

(4) 견해별 형량범위안

(가) 다수 의견(10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- 8월	6월 - 1년6월	10월 - 2년6월

(나) 소수 의견(2인)

유형	구 분	감경	기본	가중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4월 - 10월	8월 - 1년6월	10월 - 2년

6. 소결론 - 형량범위(안)

유형	구 분		감경	기본	가중
1	비영업적·비조직적 범행	의견 일치	-6월	4월-10월	6월-1년2월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다수 의견	-8월	6월-1년 6월	10월-2년 6월
		소수 의견	4월-10월	8월-1년 6월	10월-2년

## V. 향후 일정

- 6기 설정범죄(명예훼손, 전자금융거래법위반,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범죄)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방안(양형인자/집행유예 참작 사유) 검토
- 일시 : 2018. 11. 12.(월) 15:30~